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Local Tax Compliance

김기성** · 김종순*** · 홍근석****

Kim, Ki-Sung · Kim, Jong-Soon · Hong, Geun-Seok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정성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방세 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세제 공정성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가 공정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김기성(2014)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건국대학교 행정학박사(주저자)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동저자)

****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4. 11. 7, 심사기간(1, 2차): 2014. 11. 7 ~ 2014. 12. 15, 게재확정일: 2014. 12. 15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온라인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3.0과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연계하여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세자들이 보다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지방세, 납세순응, 지방세 납부시스템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and to recommend financial policies based on these result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from the taxpayers' perspectives. In order to examine the taxpayers' perceptions on making payments, I used data from a survey which includes the users of 'etax.busan.go.kr.' The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Independent factors such as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tax payment system by the users of online payment services pro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local tax compliance.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and meaningful effect was 'fairness of taxation'. This implied that it was critical to direct more administrative efforts to make taxpayers perceive that taxation was made on fair grounds. To increase tax compliance from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educate taxpayers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about tax structures, construct more convenient tax payment systems, and diversify tax payment methods.

□ Keywords: local tax, tax compliance, local tax payment system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부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먼저 지방세입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지방세 세수신장률이 점차 감소¹⁾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2014년부터 세외수입 과목 개편²⁾으로 인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체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3년 51.1%에서 2014년 44.8%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8개(32.0%)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세출의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대,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0.9%에서 2014년 26.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행하는데 소요³⁾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은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Rodden(2002)이 지적하는 것처럼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책임성과 지출 책임성 간의 괴리를 야기하며, 이러한 재원조달 책임성과 지출 책임성 간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적 지출을 증가시킨다. 즉, 자신이 사용하는 재원의 조달에 책임성을 갖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증대하려는 행태를 나타내게 되며, 지역 주민들도 필요 이상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요구하게 된다(홍근석·이용모, 201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의 확충을 통해 세입-세출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과 같은 증세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다.

1) 2012년 결산 기준 지방세 세수신장률은 3.1%로 2011년의 5.5%보다 2.4%p감소하였으며, 국제세수신장률 6.6%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국세청, 2013; 안전행정부, 2013).

2) 기존의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을 개선하여 '보전재원등 및 내부거래' 과목을 신설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용자금 원금수입을 새로 신설된 과목에 포함하였다(안전행정부, 2014).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9. 3)에 따르면 2014년에 소요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1조 7,229억원이며,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2조 3,94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12년 결산 기준 3조 5,373억 원으로 2011년보다 1,365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부과액 58조 4,744억 원의 약 6%에 해당된다. 이는 지방소비세(2조 9,606억 원)나 담배소비세(2조 7,850억 원)보다도 큰 규모이며, 지방세 체납액 및 체납자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 및 납세불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며, 체납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야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지방세 체납은 성실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많은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납세순응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납부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납세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는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과 함께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순응행위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의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김영락·임영규, 2013).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세 납세순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세무징수자의 입장에서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주로 세무조사 적발확률, 세율 및 가산세율, 세무조사 적법성 등과 같이 지방세 징수권한이 있는 납세당국이 납세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납세자 개인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납세자의 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효과성을 예측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전병목, 2011).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지방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납세순응의 의의

순응(compliance)이란 '정책의도나 정책내용에 포함된 행동규정에 일치된 집단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반면, 불응(non-compliance)은 순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정책의도나 행동규정에 일치되지 않는 태도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김남욱,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순응은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세를 납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영락·임영규, 2013). 그리고 납세순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납세불응은 조세회피(tax evasion) 또는 조세포탈(tax avoidance)로 나타나게 된다.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세회피가 세법 규정에 반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⁴⁾를 지칭하는 반면, 조세포탈은 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차이가 존재한다(홍학표, 1988).

이러한 납세순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납세순응행위에 반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려고 하는 접근방법이다. 다음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조건과 납세순응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려고 하는 접근방법이다(박명호, 2008; 구광희, 2010; 임영규, 2012 재인용). 납세순응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Becker(1967)의 범죄경제학 접근법에서 도출된 재무중심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개인들이 탈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탈세가 발각되어 벌칙을 받을 위험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또는 납세순응의 기대효용을 최대화된다고 가정한다. 즉, 탈세를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이 탈세가 발각되어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정태성, 2010). 경제학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자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탈세행위와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4)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인 절세(tax saving)와 비합법적인 조세회피 행위인 탈세(tax dodging)로 구분할 수 있다. 절세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세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인 반면, 탈세는 의도적이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Richupan, 1984; 정태성, 2010 재인용).

Allingham & Sandmo(197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Falkinger & Walthe(1991)와 Nagin(1990)의 연구는 성실납세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세무조사와 같은 강제적 유인책에 비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김영락·임영규, 2013).

다음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재무중심모델에서 제시하는 것 보다 많으며,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보다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Fischer, Wartick & Mark(1992)의 확장모델은 재무중심모델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변수에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납세자의 인식·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세시스템 구조, 탈세 기회, 납세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정태성, 2010). 대표적으로 Spicer(1986)는 심리원가의 개념을 적용한 납세행동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심리원가는 납세자의 인식(조세제도의 공정성, 사회공동체 의식 등) 및 태도(납세자에 대한 도의적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와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Weigel, Hessing & Elffers(1987)는 사회·심리적 조건과 탈세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납세자 개개인의 사회·심리적 조건을 측정하면 납세자들의 탈세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영락·임영규, 2013).

2.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

경제학 분야에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이론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Allingham & Sandmo(1972)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범죄경제학의 기본구조를 사용하여 탈세행위를 수익률이 높은 위험자산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납세순응행위를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에 게임이 이루어지는 환경 하에서 납세자들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과 탈세행위 발각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납세자에게 비용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세무당국에 최적의 소득규모를 신고하게 된다. 이 모형은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납세순응에 대한 많은 경제학적 연구들⁵⁾이 대부분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현진권, 2005).

그러나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대한 초기 모형은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세무조사와 가산

5) 예를 들어 Dubin & Wilde(1988)과 Alm, Bahl & Murray(1993) 등은 세무조사가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Boyd(1986)는 처벌위주의 정책이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율 등과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 나타나는 납세자의 탈세행위나 납세순응행위를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즉, 납세순응 영향요인의 초기 모형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비율이 매우 낮고 탈세가 발각되었을 경우의 가산세율도 별로 높지 않은 많은 국가들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이러한 측면에서 Falkinger & Walther(1991)와 Nagin(1990) 등은 납세자의 경제적 유인책 위주의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위주의 정책수단들이 처벌 위주의 정책수단에 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유인책 위주의 정책수단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세액감면, 낮은 수준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임영규, 2012).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납세자의 소득 수준, 위험회피 성향, 세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조세부담 세율, 공공서비스의 질 등을 제시하였다(박명호, 2008).

이후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에 기반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규명되었다.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의식구조와 납세순응 동기 등을 파악함으로써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순응행위를 납세자의 가치·태도·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함수로 표현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 납세불응 기회의 대리변수, 태도와 인식 변수, 구조변수 등 4가지 유형으로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순응 영향요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나이, 성별), 납세불응 기회의 대리변수(교육수준, 소득수준, 소득원천, 직업), 태도와 인식 변수(조세시스템의 공평성, 윤리, 동료의 영향), 구조변수(조세시스템의 복잡성, 세무당국과의 관계, 처벌수단, 발각확률, 세율)로 측정된다(Jackson & Milliron, 1986; 김진황, 1997, 정태성, 2010 재인용).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은 1차적으로 경제학적 접근방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율, 세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소득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2차적으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납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납세의식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납세의식은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제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도적 요인은 조세체계 내부에 작동하는 제도적 변수들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으로 세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세율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은 조세체계

의 외부에 위치하면서 조세의식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적 요인에는 문화, 교육, 경제상황, 사회계층, 연령, 성별, 결혼여부, 직업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변수들은 서로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도, 조세부담의 적정성 및 공평성, 탈세에 대한 태도 등이 납세의식을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명호, 2008).

3. 선행연구 검토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태영(1990)은 소득, 세율, 정부 신뢰성 등의 변수가 성실납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수록 성실납세를 기피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빈도가 많을수록 납세자들은 세금 납부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환(1992)은 납세자를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 납세행태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세율과 불성실납세 간의 관계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적발확률과 가산세는 불성실납세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일반과세자들이 과세특례자들보다 불성실납세의 유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황(1993)은 우리나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기피행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풍토가 기업의 납세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형환(1993)은 세무행정의 공정성, 실제 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율을 바탕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8가지의 실험사례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세율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의 공정성이 낮을수록 성실납세 욕구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영(1993)은 조세회피의 의사결정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산세율이 높을수록 성실납세를 하려는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납세자들은 가산세율보다 적발확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제시하였다. 권영모(1994)는 조세회피행위에 따른 조세공평성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 변수는 납세자가 정부에서 제 공받는 편익에 따라 조세에 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찬웅(1996)은 경제모형을 바탕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납세자의 소득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세율구조를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하고 벌금 부과율과 세무조사 확률을 높이는 경우 위협회피형 납세자들의 신고소득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변용환(1998)은 조세형평성을 납세순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인식하여 조세회피 기회에 따른 납세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구조의 불공평성이 강력한 조세저항 인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며, 조세형평성은 납세성실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수(1999)는 자영업자와 월급여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납세자의 납세의식은 조세회피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력은 조세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석무·남기원(2000)은 세제인지도와 성실납세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제의 공평성과 세법의 복잡성은 성실납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양식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은 성실납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진권·박창균(2001)은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비율의 강화뿐만 아니라 가산세율 강화, 납세자들의 납세의식 제고, 납세관련 홍보 등의 조화가 납세순응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황이규(2004)는 조세제도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제도적 요인 중 탈세적발확률은 조세회피 성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심리학적 요인 중 조세회피 만연도는 조세회피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진권(2005)은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와 가산세율은 납세순응에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조세에 대한 교육이 납세순응을 제고하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상(2009)은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납세자가 적어 소극적인 홍보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구광희·박무현·김영락(2010)은 세무조사 관련 요인들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의 적발확률과 중립성은 성실납세와 조세회피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을(2010)은 경제학적 접근방법에 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윤리의식 등을 추가하여 납세자들의 조세회피행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윤리의식은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기회와 윤리환경에 대한 납세윤리의식의 매개효과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춘호·서희열·배수진(2011)은 국제청 홈택스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국제청이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납세순응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근(2012)은 세무정보 전산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은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에 정(+)⁶⁾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납세율리 제고 및 성실납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납세순응 영향요인은 크게 조세체계에 관한 제도적 요인, 납세체계에 관한 운영적 요인, 인구통계적 특성⁷⁾과 같은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세체계에 관한 제도적 요인에는 세율, 가산세율, 적발확률 등의 경제적 변수와 제도 복잡성, 세제인지도, 조세공평성 등의 납세자 인식 변수가 포함된다. 다음으로 납부체계에 관한 운영적 요인은 보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요인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납부체계에 관한 운영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소득 수준, 학력수준 등의 변수가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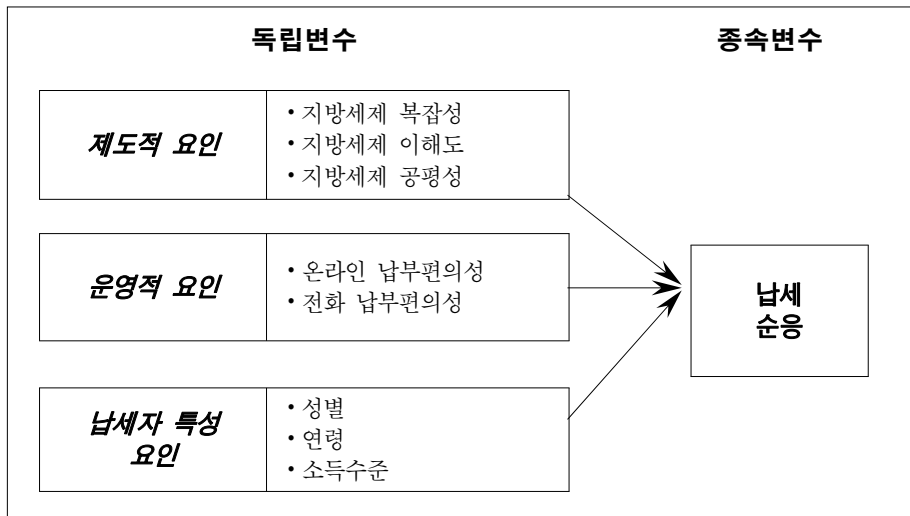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⁶⁾을 도출하였다. 먼저 제도적 요인

6)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의 접근방법은 크게 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세금을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세무조사·가산세·세액감면 등의 변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최근에

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제도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요인으로는 세율 요인, 조세회피 제재 요인, 적발확률 요인, 조세제도 복잡성, 조세제도 이해도, 조세제도 공정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으로 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제 복잡성은 “세금납부와 관련된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십니까?”, “납세자들의 지방세 체납 및 납부 기피 원인의 상당부분이 세법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한 세법구조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비율을 낮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지방세제 이해도는 “지방세는 꼭 필요한 세금이라고 인식하며 부과근거에 동의하십니까?”, “지방세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제 공정성은 “지방세의 세율구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이 자주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1> 연구모형

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들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학적 접근방법에서 강조하는 세무조사·가산세·세액감면 등의 변수는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세 납세환경의 개선은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배춘호·서희열·배수진, 2011). 본 연구에서는 납세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세 납세에 관한 운영적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국제 납부시스템인 홈택스를 중심으로 납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일부의 연구가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운영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중심으로 납부시스템 및 납부수단별 사용편의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과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창구 납부에 비해 온라인 전자납부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ARS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납부24)을 통한 지방세 납부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은 납세의식의 형성뿐만 아니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요인들이다(박명호·심태섭, 2008). 예를 들어 성별의 경우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나 심리상태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은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하나이다(정태성, 2010).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으로 측정되었다. 즉,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에 대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적절한 몫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체납 또는 축소 신고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체납 또는 축소 신고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을 측정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방세 납세순응의 제도적 요인으로는 조세제도 복잡성, 조세제도 이해도, 조세제도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조세제도의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Vogel(1974)은 조세제도의 복잡성과 납세순응 사이에 부(-)의 관계가 존재하며,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할수록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회피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심석무(2002)의 연구에서도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회피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납부한 지방세가 적절한 곳에 올바르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즉, 납세자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납세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는 납세자의 조세회피 욕구를 억제하여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박명호·심태섭, 2008).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세 후 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납세 후 소득분포를 고려하여 지방세제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제의 공평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소득액, 소득원천, 나이, 부양가족 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지방세제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관한 일부 연구는 조세제도 공평성과 납세순응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조세제도 공평성과 납세순응 사이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rocano, 1984; 남기원, 2001 재인용).

일반적으로 조세제도 복잡성은 납세순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세제도 이해도와 조세제도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황, 1993; 변용환, 1995; 조정환, 1996; 심석무·남기원, 2000; 문광주, 2008; 홍성선, 2009 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제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방세제 이해도와 지방세제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지방세제 복잡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방세제 이해도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방세제 공평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적 요인으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이용환경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적 요인과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배춘호·서희열·배수진(2010)의 연구에서 세금 납부시스템의 사용편의성과 납세순응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홈택스시스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

는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하는 편의성 요인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납세순응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성선, 2009; 배춘호·서희열·배수진, 2010).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³⁾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지방세 납부시스템 중에서 온라인 납부시스템과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이 높을수록 납세자의 납세순응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⁵⁾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 특성 요인을 성별, 연령,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Young(1994), Mason & Calvin(1978)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남성의 소득수준이 여성보다 높고, 전통적으로 여성은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도덕적 제약이나 규칙 등에 익숙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Mason & Calvin, 1978; Tittle, 1980). 그리고 연령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령과 납세순응 사이에 정(+)⁶⁾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picer & Lundstedt(1976), Witte & Woodbury(1985), Dubin & Wilde(1988)는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납세순응도가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수준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국내 연구들은 소득수준이 납세순응에 부정적인(-)⁷⁾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우윤(1997)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포탈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명호·심태섭(2008)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금을 축소보고하려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납세순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수준은 납세순응에 부정적인(-)⁹⁾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남성보다 여성의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2] 연령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¹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소득수준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¹¹⁾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설문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총 3,377건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항목이 지나치게 많거나 무성의한 응답으로 실증분석이 어려운 417건의 설문지를 제외한 2,960부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요인(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정성), 운영적 요인(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납세자 특성 요인(성별, 연령,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납세순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전체 응답자 대상 분석결과

전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정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은 종속변수인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정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지방세 납세순응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성별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⁷⁾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 납세순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세제 공정성(0.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설명변수에 대해 추정된 각각의 회귀계수(β_i)는 개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변량의 크기가 서로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느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회귀계수를 상대적인 척도로 변환시켜야 한다. 즉, 회귀계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회귀계수를 표준화시켜야 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그 다음으로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0.135), 세제이해도(0.122), 소득수준(0.104), 연령(0.075)의 순서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지방세가 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지방세제 이해도와 지방세제 공평성은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지방세제 이해도와 지방세제 공평성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제 이해도가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며(심석무, 2002; 김성열, 2007; 신용대, 2008 등), 조세 불공평성이 조세저항 및 조세회피를 유발한다는(김진황, 1993; 변용환, 1995; 조정환, 1996; 최근주, 2003; 홍성선, 2009 등)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연구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Vogel(1974)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제 복잡성이 지방세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Westat(1980)의 연구에서는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단념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제의 복잡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운영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1>에 제시된 평균값을 통해서 볼 때, 응답자들은 전화 납부시스템보다 온라인 납부시스템을 편리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납부시스템은 납부절차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전화 납부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납부절차가 불편하고 복잡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방세 납세시스템 개선이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온라인 납부시스템의 도입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화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납세자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연령에 대한 가설은 채택된 반면, 성별과

소득수준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순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경우에는 연구가설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별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신세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Tittle, 1980; Graetz & Wild, 1985; Young, 1994 등).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권리신장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사회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활양식이나 도덕적 제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납세순응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주장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이 지방세 납세순응에 부정적인(-)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소득수준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납세순응 간의 관계에 관한 국외 연구의 경우에는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와는 다르게 소득수준과 납세순응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Song & Yarbrough, 1978; Mason & Calvin, 1984; Madeo, Schpenski & Uecker, 1987).

<표 1> 분석결과(전체 응답자)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TOL	VIF
(상수)	2.085	.254		8.219**		
지방세제 복잡성	.000	.031	.000	-.005	.913	1.095
지방세제 이해도	.122	.040	.122	3.038**	.795	1.259
지방세제 공평성	.149	.031	.173	4.799**	.982	1.018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145	.041	.135	3.580**	.901	1.110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023	.026	.032	.873	.945	1.058
성별	.068	.051	.049	1.336	.941	1.063
연령	.062	.031	.075	2.000*	.905	1.105
소득수준	.136	.049	.104	2.747**	.885	1.130

a. 종속변수: 지방세 납세순응

주: *(p<.05), **(p<.01)

2. 지방세 체납자 대상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들과 체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소득수준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성별, 연령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제 복잡성, 지방세제 이해도,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성별, 연령, 소득수준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이 공통적으로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지방세제 이해도와 소득수준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지방세제 공평성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화회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의 표준화회귀계수 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지방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공평성 뿐만 아니라 온라인 납부시스템의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2〉 분석결과(지방세 체납 여부에 따른 비교)

모형	체납 경험 없음		체납 경험 있음	
	B	베타	B	베타
(상수)	2.361**		1.442**	
지방세제 복잡성	-.014	-.017	.037	.046
지방세제 이해도	.107*	.104	.150	.163
지방세제 공평성	.148**	.174	.175**	.202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115*	.103	.187*	.192
전화 납부시스템 편의성	.021	.031	.056	.068
성별	.030	.022	.164	.121
연령	.067	.083	.028	.032
소득수준	.143*	.112	.104	.076

a. 종속변수: 지방세 납세순응

주: *(p<.05), **(p<.01)

V. 결론

본 연구는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실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960명의 전체 설문응답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세제 이해도, 지방세제 공평성,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 연령, 소득수준의 증가는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회귀계수를 통해서 볼 때 지방세제 공평성(0.173),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0.135), 세제이해도(0.122), 소득수준(0.104), 연령(0.075)의 순서로 지방세 납세순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와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구분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과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이 공통적으로 지

방세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지방세제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지방세 체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지방세제 공평성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의 영향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방세 납세순응의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제의 공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 통장압류시스템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체납자의 양산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초과누진세율을 체납 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여 장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에게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무조사유예 및 납세담보제공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유태현, 2013).

둘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보다 다양한 지방세 납부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편의성은 지방세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확산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납부할 경우 과세당국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를 고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바로 납부하고 자신의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간단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고지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 납세순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14년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납세순응 영향요인을 도

8) 대구광역시 동구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몰라 신고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취득(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상속 등)의 경우 납세자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세 신고 세목 중 납세자가 신고사항을 잊어버리기 쉬운 취득세를 중심으로 납세자들에게 미리 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방세 납세순응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하였다. 이로 인해 횡단면적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시계열에 걸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납세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구광희. (2010).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구광희·박무현·김영락. (2010). 세무조사의 요인이 납세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34: 1-25.
- 국세청. (2013). 「2013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권영모. (1994). 「납세자의 조세공평 성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김기성. (2014).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 연구: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남옥. (2006).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고시연구』, 33(11): 344-348.
- 김성열. (2007).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김영락·임영규. (2013). 납세의식이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36: 203-225.
- 김진황. (1993).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진황. (1997). 납세자 순응연구의 문헌적 고찰. 『부경대학교 논문집』, 2(1): 231-249.
- 남기원. (2001).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문광주. (2008). 「부동산 양도인이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박명호. (2008).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한국조세연구원.
- 박명호·심태섭. (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 회계저널』, 9(4): 55-84.
- 변용환. (1995).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기준: 다차원 모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변용환. (1998). 납세자의 조세관. 『세무학연구』, 11: 221-264.
- 배춘호·서희열·배수진. (2011). 국세청 홈텍스서비스시스템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8(1): 335-367.
- 신용대. (2008).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신형환. (1993). 「조세회피와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심석무. (2002).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조세회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논문집』, 17: 130-132.
- 심석무·남기원. (2000).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성실납세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26: 29-55.

- 안전행정부. (2013). 「2013 지방세통계연보」. 안전행정부.
-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안전행정부.
- 유시영. (1993). 「조세회피 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유태현. (2013).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우윤. (1997). 「납세자의 조세포탈 성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종환. (1992). 「납세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이희연·노승철. (2013). 「고급통계분석론: 이론과 실습」. 경기: 문우사.
- 임영규. (2012). 납세순응 행위의 이론변수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세무회계연구」, 34: 1-20.
- 전병목. (2011).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전태영. (199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정재울. (2010).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1(1): 137-166.
- 정찬웅. (1996). 납세자의 소득신고 수준결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회계학연구」, 21(2): 19-43.
- 정태성. (2010).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정희상. (2009).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조정환. (1996).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8: 243-269.
- 최근주. (2003).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최임수. (1999). 조세회피요인에 대한 납세자 인식의 지역간 비교. 「세무학연구」, 13: 287-320.
- 현진권. (2005).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11(3): 135-175.
- 현진권·박창균. (2001).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홍근석·이용모. (2014). 재정분권이 거버넌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2): 103-125.
- 홍성근. (2012). 「세무정보 전산화와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전자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홍성선. (2009).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홍학표. (1988). 「납세자의 조세저항행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황이규. (2004).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Allingham, M. G. and Sandmo, A.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323-338.

- Alm, J., Bahl, R. and Murray, M. (1993). Audit Selection and Income Tax Underreporting in the Tax Compliance Gam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2(1): 1-33.
- Becker, G. S. (1967).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y*, 78: 526-536.
- Boyd, C. (1986). The Enforcement of Tax Compliance: Some Theoretical Issues. *Canadian Tax Journal*, 34(3): 588-599.
- Dubin, J. A. and Wilde, L. (1988).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41(1): 61-74.
- Falkinger, J. and Walther, H. (1991). Rewards versus Penalties: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Review*, 19(1): 67-79.
- Fischer, C., Wartick, M. and Mark, M. (1992).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A Review of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1: 1-46.
- Graetz, M. and Wild, L. (1985). The Economics of Tax Compliance: Fact and Fantasy. *National Tax Journal*, 38(3): 355-363.
- Jacjson, B., and Milliron, V.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125-165.
- Madeo, S. A., Schepanski, A. and Uecker, W. C. (1987). Modeling Judgement of Taxpayer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62(2): 323-342.
- Mason, R. and Calvin, L. D. (1984).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7(4): 489-496.
- Nagin, D. (1990). Policy Options for Combating Tax Noncomplianc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9(1): 7-22.
- Procano, T. (1984).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The Accounting Review*, 59(4): 619-636.
- Richupan, S. (1984). *Income Tax Evasion: A Review of the Measurement Techniques and Some Estimates of the Developings*.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DM/84/46, July: 78-101.
- Rodden, J. A. (2002). The Dilemma of Fiscal Federalism: Grants and Fiscal Performance Around the Worl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3): 670-687.
- Song, Y. D. and Yabrough, T. E. (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5): 442-452.
- Spicer, M. W. (1986). Civilization at a Discount: 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9(1): 13-20.

- Spicer, M. W. and Lundstedt, S. B. (1976).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31(2): 295-305.
- Tittle, C.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27(4): 499-513.
- Weigel, R., Hessing, D. and Elffers, H. (1987). Tax Evasion Research: A Critical Appraisal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 215-235.
- Westat, Inc. (1980). *Individual Income Tax Compliance Factors Study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Prepared fo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ebruary 4, 1980, by Westat, Inc., Rockville, Maryland.*
- Witte, A. D. and Woodbury, D. F.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s. *National Tax Journal*, 38: 1-13.
- Young, J. C.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Noncompliance: Evidence from the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2): 82-105.

김기성: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산소프트 및 다산시스템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지방세, 지방재정, 지방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주거환경학회지, 10-3)” 등이 있다(junsupapa@nate.com).

김종순: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환경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재정분권이 정부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오염물질배출업소 감시·단속권한의 지방위임 효과에 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47-4)” 등이 있다(jongsoon@konkuk.ac.kr).

홍근석: 건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방재정, 지방자치, 재무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재정분권이 거버넌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2)”,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지방행정연구, 28-3)” 등이 있다(hong0582@dgi.re.kr).

【부 록】

부록 1. 자료의 기초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방세제 복잡성	2959	2.82	0.7372	1.00	5.00
지방세제 이해도	2959	3.18	0.6370	1.00	5.00
지방세제 공평성	2959	3.25	0.7556	1.00	5.00
온라인 납부편의성	2901	4.49	0.5572	2.00	5.00
전화 납부편의성	2901	2.98	0.8993	1.00	5.00
성별	2959	1.29	0.4560	1.00	2.00
연령	2959	2.88	0.8600	1.00	5.00
소득수준	2959	2.41	0.6920	1.00	4.00
납세순응	2959	4.01	0.6193	1.00	5.00

부록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90	70.6
	여성	869	29.4
	합계	2,959	100.0
연령	30세 이하	59	2.0
	31-40세	1,023	34.6
	41-50세	1,199	40.5
	51-60세	579	19.6
	61세 이상	99	3.3
	합계	2,959	100.0
주택 소유	예	2,154	72.8
	아니오	805	27.2
	합계	2,959	100.0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229	7.7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409	47.6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199	40.5
	8,000만원 초과	122	4.1
	합계	2,959	100.0
재산 규모	1억원 이하	1,294	43.7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778	26.3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426	14.4
	3억원 초과	460	15.6
	합계	2,958	100.0
체납 여부	체납 경험 없음	2,354	79.6
	체납 경험 있음	605	20.4
	합계	2,959	100.0